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